

日 수출규제, 北 중재자 부정... 외교위기 직면한 文

외교부, 日 공관장회의의 참석 불구 '국장급 협의' 진행 못하고 귀국

북 매체 "남조선 끼어들 필요 없다 실권행사 美 상대하는게 더 생산적"

문재인 정부에게 7월은 '외교악몽의 달'인 모양새다.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 기업 수출규제 정책이 시행됐음은 물론, 북한으로부터 한반도 비핵화 관련 '대한민국 중재자 부정론'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외교라인 인사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도 하다.

우선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우리나라 기업 대상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제재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들어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우리 정부를 필두로 국제사회에서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경제 보복'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를 위해 다양한 외교 활동을 진행했다. '동상통'으로 정평이 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관련 미국 측과 대응을 논의했다. 김 제2차장은 13일 귀국길에 오른 가운데, 미국 딜레스 국제공항

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미국은 일본의 대(對)대한민국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한일갈등이 한미일 공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공감했다"고 말했다. 다만 수출규제 당사자인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와 어떠한 대화도 진행하지 않는 실정이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이 지난 11일 일본 니가타에서 열린 일

본지역 공관장회의에 참석했으나, 일본 측과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귀국했다.

다음은 북한의 '대한민국 중재자 부정론'이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3일 '소외된 결코 공연한 우레가 아니다'라는 논평을 통해 "북미가 마주 앉아 양국간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마당에 남조선이 굳이 끼어들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로서는 미국 승인 없이는 한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상대와 마주 앉아 공담하기보단 남조선에 대한 실권을 행사하는 미국을 직접 상대해 필요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게 훨씬 생산적"이라고 부연했다. 우리 정부가 주장했던 '한반도 중재자 역할'을 북한이 부정하는 것이다.

북한의 다른 대외선전매체인 메아리 역시 '소외는 스스로 청한 것'이라는 논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상대와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며 "북남관계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대

화와 실천이 없는 협상은 의미가 없다. 열백번 마주 앉아 대화를 진행하고 아무리 좋은 선언을 발표해도 외세 눈치나 보고 이러저러한 조건에 빙자해 실천하지 않는 상대와 마주 앉아 봐야 무엇이 해결되나"라고 우리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스스로 자처한 '대한민국 소외'이니 거기서 벗어나는 것도 남조선 당국의 몫"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강한 면모를 보였던 외교 분야에서 위기를 직면했다"며 "특히 '한반도 평화 중재자 역할'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과 정부를 북한이 부정하는 게 이를 방증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역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들을 설득시킬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국정지지를 하락은 물론, 그간 선보인 외교 행보에 큰 상처가 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소주성, 단기부양책... 기업 자생력 길러야”

〈소득주도성장〉

김종석 의원 자료 토대 경제 분석

지난해 소득 5분위 '역대 최악' "현 정부, 2년간 중요소생산성 등 3개변수 하락 가속화 정책 사용"

문재인 정부 3대 경제 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은 '성장 정책'이 아니라 보수권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히 "소주성은 '단기경기부양책'이기 때문에 생산증가로 이어질 수 없다"고 지적한다.

메트로신문은 13일 김 의원이 제공한 대한민국소득분배율·성장률 자료를 분석하고, 경제 회복 방안을 알아봤다.

◆"정부, 잡초 섞인 꽃밭에 비료 뿌려" '소득주도성장'은 근로자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 성장을 유도한다는 이론이다. 공정경제·혁신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으로 꼽힌다.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국회 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김 의원은 먼저 "경제 성장은 국내 총생산(GDP)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저소득층 임금 인상과 생계비 부담 해소 등 정책은 좋지만, GDP 성장을 돕진 못한다는 지적이다. 소주성은 고전적인 단기경기부양책이라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실제 김 의원이 취합한 한국은행·국

민계정·통계청·가계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5분위 배율(최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최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은 5.95배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또 성장률은 이명박 정부의 경우 평균 3.3%, 박근혜 정부는 3.0%를 기록했다. 현 정부의 경우 현재 2.5%다.

김 의원은 "소득 5분위 배율이 악화하면 성장률이라도 오르거나, 소득 5분위 배율이 올랐다면 성장률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동시에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 정부 경제 정책 중 GDP를 높인다는 개념은 전혀 없다"며 "단순히 '저소득층 생계비를 보조하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총수요확장 정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급인상... 빈부격차 재촉" 잠재성장률 결정 요인 세 가지는 ▲총요소생산성 ▲자본축적 ▲잠재노동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현 정부는 지난 2년 간 세 가지 변수 하락을 가속화하는 정책만 사용했다"고 짚었다.

먼저 자본축적(자본투입)이 감소한 이유는 현 정부의 반기업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기업 투자가 위축하면서 설비투자 또한 4분기 연속 감소하고, 생산성도 저하했다는 것이다.

잠재노동의 경우 총노동투입량이 2017년 612.8억 시간에서 올해 588.1억 시간으로 24.7억 시간 줄었다. 증감률

은 -4.0%다. 지난 2년 간 고용이 감소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가구 20%의 지난해 말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기준 14.2% 증가했지만, 하위 저소득 가구 20%는 36.8% 감소했다.

◆"정부, 과신 버리고 기업 자생 도와야" 김 의원은 현 정부가 개인정보·인공지능(AI)·모빌리티·공유경제·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에 '적합하지 않다'고 일관한다. 정부가 반(反)기업·반시장 정책 펼치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가 가동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등 민관합동 자문 조직 수준으로는 경제 발전과 4차산업혁명 등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실질적 조정 권한을 가진 4차산업혁명·규제혁신 통제 타워를 정부 내에 설치하고, 공공기관부터 공정경제 모범을 보여야 경제가 산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시장·기업에 대한 불신과 정부 기능에 대한 과신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치인·관료로 구성된 정부는 먹고 사는 문제에 유능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고언했다.

김 의원은 또 "사회주의 관치 계획 경제의 말로를 상기해야 한다"며 "정부는 경제적 능력에 대한 과신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간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경제도 반등한다는 것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

해수부 '7개 테마 가족 바다여행 50' 발간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 어촌·어항 인근의 바다 여행 명소와 관광지를 소개하는 '7가지 테마(주제)로 떠나는 가족 바다여행 50' 책자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책자는 어촌체험 휴양마을, 국가 어항, 다기능어항 등 총 50곳의 어촌 여행지를 7가지 주제로 나누어 소개한다. 7가지 주제는 ▲축제 여행

▲바다 누비길 여행 ▲별미여행 ▲사진여행 ▲해안 드라이브 여행 ▲해양 레저여행 ▲캠핑 여행이다. 책자에는 주제별 여행지뿐만 아니라 추천 일정, 체험, 주변 관광지, 지역 별미까지 실용적인 정보와 다양한 사진 등을 담았다. 이 책자는 도서관, 관광안내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무료로 배포된다. /석대성 기자

숙박·렌터카 피해 급증... 대책마련 시급

이태규 의원 "4년만에 피해 2배 증가"

숙박업과 렌터카 관련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 보상을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접수한 숙박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289건이었다. 특히 2014년 346건이었던 피해 사례는 지난해 81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과다한 위약금 청구'나 '정당한 환급요구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가 86%로 대부분이었다. 이어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5%를 차지했다. 피해는 늘고 있지만, 피해사례 절반은 실질적 보상 대신 ▲단순 정보 안내(1045건) ▲조정신청(375건) ▲취하중지·처리불능(176건) 등으로 끝났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수는 1596건(49%)에 달한다. 렌터카 역시 같은 기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1361건으로 매년 평균 250건 발생했다. /석대성 기자

농진청, 비닐하우스 '비닐' 국산화 쟁점

우리 식탁을 책임지는 국내 시설원예(비닐하우스) 농가 상당수가 일본산 비닐(필름)을 사용하고 있어 정부가 국산화 추진에 팔을 걷어붙였다.

14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시설원예 재배 면적은 5만2418ha로, 그 가운데 비닐하우스가 5만1997ha를 차지해 사실상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연간농업용 필름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2010년에는 국산 118t·일본산 1500t

으로 일본산이 국산을 10배 이상 압도했다. 그러나 국산 생산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는 국산 2450t·일본산 2850t 등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국내 시설원예 농가에서는 여전히 일본산 비닐이 상당수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5년 시설농가 160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25.9%가 일본산 필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석대성 기자